
연구비 부정행위 방지 대책

[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]

I. 추진배경

- 최근 언론을 통해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비리가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연구비에 대한 집중 점검(감사) 뿐만 아니라 강도높은 보완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
 - ※ 서울대학교 김○○ 교수 연구비 7억 6500만원 횡령(2015.4.5.)
- 이에 따라 우리 학교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 비리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

II. 연구비 부정행위 대책 방안

① 연구 시스템 개선

- ① 연구행정시스템 조기 운영
 - 현재 시범 운영중인 연구행정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상시 모니터링 확대/강화
- ② 법인카드 사용 철저 확인
 - 개인법인카드 → 연구프로젝트별 개별 카드이용 확대
- ③ 학생인건비(연구원) 지급 관리 철저
 - 연구책임자 사전 교육 실시
 - 학생(연구원)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

②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

- ① 내부 통제 기능 강화
 - 현재 년 1회 내부감사 → 년 2회 실시
- ② 내부징계 강화 : 연구비 부정사용에 관련 징계항목 신설
- ③ 연구윤리 교육 확대 실시

- 신규과제 협약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
- 년 1회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실시(집체)
- 연구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

③ 부패 신고 활성화

- ①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선 및 신문고(무기명) 개설
 - ※ 기존 연구윤리신고센터 확대 개편
- ②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

Ⅲ. <참고자료> 연구비 집행 부당 사례

- ①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,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
- ② 위장 가맹점(유흥주점) 부정 사용
 - 사적용도로 심야·휴일 부적정 사용
 - 위장 가맹점 사용
 - 목적외 카드 사용
 - 불법 카드할인(일명 카드깡) 이용
- ③ 유령회사 설립·거래를 통한 연구비 유용
- ④ 납품 기업과 공모하여 연구비 횡령
- ⑤ 연구장비 구매 및 허위정산 등